

동북아역사 리포트

Vol. 54

NORTHEAST ASIAN HISTORY REPORT

2023년 12월 15일

국서(國書)를 통해 본 조선과 후금의 국교

장정수_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머리말

1. 조선과 건주여진의 문서 왕래
2. 광해군 시기의 대(對)후금 외교와 국서 발송
3. 조선과 후금의 국교 수립과 국서 왕래의 정례화
4. 청의 일방적인 서식 변경과 국교 단절

맺음말

국서(國書)를 통해 본 조선과 후금의 국교

장정수_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머리말

최근 중국에서는 한국과의 역사적 관계를 ‘종번(宗藩)’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하고자 한다.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정립하고, 그 안에 한국을 포함시키려는 의도에서다. 하지만 종족이나 지역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은 시기마다 달랐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꽤 역동적으로 변화했다. 따라서 하나의 고정된 틀로 한중 관계를 설명하려는 것은 중국 편향적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왕조들과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논리로서 역사 왜곡의 우려가 있다.

그간 조공 체제의 전형으로 여겨져 온 조선과 명(明)·청(淸)의 관계는 더욱 위험하다. 외교 의례 면에서 조명(朝明) 관계와 조청(朝淸) 관계는 닮아 있었다. 하지만 전자와 후자는 그 기원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다. 조선과 명은 비슷한 시기에 건국되었고, 양국 관계는 비교적 신속하게 안정적인 궤도로 올라섰다. 반면 조선과 건주여진(建州女眞)·후금(後金)·청으로 변모한 후자는 단계마다 큰 갈등을 노정했다. 조선은 명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와중에 후금과 국교를 수립했는데, 당대인들의 관점에서 청의 전신(前身)인 후금은 ‘중국’이 아니었다.

최근 드라마 「연인」이 방영된 이후 병자호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초반에는 후금의 한(汗) 홍타이지가 조선에 보낸 국서(國書)가 꽤 비중 있게 다루어졌고, 국서에 “너희 나라(爾國)”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었다는 대목이 나온다. 국서는 “이웃 나라(隣國)”의 군주들이 서로 주고받는 외교문서로서 병자호란 이전까지 조선과 후금의 대등한 관계를 상징했다. 병자호란은 후금(淸)이 이러한 국서의 서식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면서 벌어진 전쟁이었다. 이 글에서는 국서를 바탕으로 조선과 후금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선과 건주여진의 문서 왕래

조선은 건국 직후부터 여진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추장’이라 불린 여진의 유력자들은 조선에 복속[來朝]하고 관직과 녹봉을 받았다. 이때까지 여진 부족 가운데 구심점이 될 만한 세력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양측 관계는 외교가 아닌 변경 관련 사안으로 다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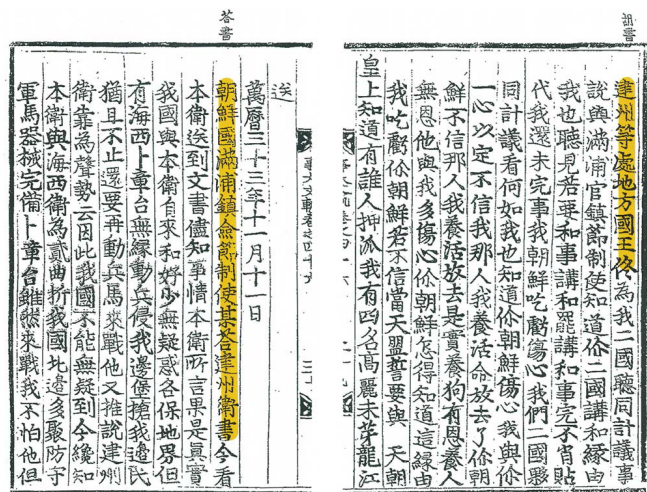
조선의 대(對)여진 정책은 훗날 청의 태조(太祖)가 되는 누르하치가 등장하면서 달라졌다. 누르하치는 건주여진의 통합을 시작으로 주변의 군소 세력들을 병합하면서 조선과의 접촉면도 넓혀 나갔다. 누르하치는 수차례 서신을 보내어 조선을 당황케 했다.

첫 번째는 1595년 불법적으로 변경을 넘었다가 건주여진의 포로가 된 조선인들을 자발적으로 송환하면서 보낸 서신이였다. 그해 12월 조선은 신충일(申忠一)을 보내 답서를 전하는 한편 건주여진의 동정을 살피게 했다. 신충일은 만포첨사(滿浦僉使)¹의 군관 자격으로 파견되었는데, 조선이 이 문제를 국가 차원이 아닌 변경 사안으로 처리하고자 했음을 뜻한다. 누르하치는 신충일에게 준 회답서에서 “여직국건주 위관속이인지주(女直國建州衛管束夷人之主)”라는 직함을 썼다.

1605년에는 누르하치가 “국왕(國王)”이라는 호칭을 쓴 서신을 보내왔다. 조선은 조정에서 논의하여 답서를 작성했지만, 발신자로는 만포첨사의 명의를 썼다. 답서의 수신자는 건주위(建州衛)로 기재하여 건주여진이 명나라에 속한 오랑캐임을 상기시켰다.

1607년에는 “오랑캐 왕(夷王)” 직함을 쓴 서신을 보내며 “조선 국왕에게 알린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조선과 ‘외교’를 맺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하지만 이 때도 조선은 만포첨사 명의로 회답했다.

누르하치는 독자적인 국가의 지배자로 행세하면서도 명나라의 권위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1595년의 서신에는 명나라로부터 받은 건주좌위(建州左衛)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1605년의 서신에서는 명 황제를 “천조황상(天朝皇上)”이라고 하였



1605년 누르하치가 보내온 ‘호서(胡書)’와 조선의 ‘답서(答書)’
출처: 『사대문궤(事大文軌)』 권46(임진왜란 사료총서 7, 對明外交)

1 만포진첨절제사(滿浦鎭僉節制使)의 약칭. 만포진은 백두산에 인접한 강계부(江界府)의 속진으로, 건주여진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던 장소이다.

으며, 1607년의 서신에서도 비슷한 어조를 보였다. 누르하치는 명의 독점적 위상을 인정하되, 그와 별개로 조선과도 외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여진 사회 안에서의 권위를 높이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조선이 보기에 여진은 내조하는 존재였으므로 외교 상대일 수 없었다. 건주여진이 명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여진 세력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했다. 그러나 조선은 건주여진의 강한 세력을 의식하여 교섭을 전면 거부하는 대신, 녹봉을 지급하는 종래의 방식으로 대응했다.

2. 광해군 시기의 대(對)후금 외교와 국서 발송

광해군 재위기(1608-1623)에는 조선과 건주여진의 관계가 역동적으로 변했다. 건주여진의 세력은 더욱 확장되었고, 후금 건국(1616)으로 이어졌다. 이때 누르하치가 명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자 임진왜란 이후 명과 긴밀히 공조해 오던 조선 역시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1619년 심하전역(深河戰役) 당시 명군과 함께 참전한 조선군이 전멸하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심하전역 이후 누르하치는 10차례 이상 조선에 서신을 보내어 국서와 차관을 요구했다. 국왕이 임명한 차관을 통해 국서를 보내라는 것이 골자였다. 조선은 누르하치의 국서를 거부하되 서신을 가져온 후금 차관들을 후대해서 돌려보내는 임기응변으로 대응했다. 다만, 후금의 의사는 확인해야 했기에 현장의 관원들이 서신을 베껴서 국왕에게 보고했다.

위의 자료는 누르하치가 1621년 3월 21일² 조선에 보낸 국서이다. 발신자는 “후금국 한(汗)”, 수신자는 “조선 국왕”으로 설정되었고, 대등한 상대에게 보내는 ‘치서(致書)’의 형식을 갖추었다. 서신에서 조선은

누르하치가 1621년 조선에 보낸 국서. 찬획사(贊畫使) 이시발(李時發)이 올린 장계에 등사되었다.

출처: 『계록(啓錄)』, 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31-170)

2 『청태조실록(淸太祖實錄)』과의 대조를 통해 이 국서가 3월 21일에 발송되었음이 확인된다.

“귀국(貴國)”, 명은 “남조(南朝)”로 기재되었고, “삼가 아뢴(謹白)”으로 마무리했으며 말미에는 후금 연호 천명(天命)으로 일자를 표기했다. 누르하치가 조선 국왕과 대등한 위치에 있음을 뜻하는 서식이었다.

조선은 회답할 수 없었다. 국서 발송은 후금을 ‘명의 건주위’가 아닌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조선은 누르하치의 의도가 명과의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는 이간책에 있다고 간주했기에 더더욱 응할 수 없었다. 후금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여진’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꾸어야 가능한 ‘파격’이기도 했다.

1621년 3월, 후금이 요동 지역을 장악하여 조선과 명의 육상 교통로가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후금은 만포 대신 의주(義州)를 통한 교섭과 조선으로 피난한 한인(漢人)들의 송환을 요구해 왔다. 조선이 응답하지 않자, 누르하치는 군사를 파견하여 압록강을 건너 한인 수백 명을 도륙하게 했다. 같은 해 8월에는 명나라 장수 모문룡(毛文龍)이 조선에 의탁하는 상황도 벌어져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누르하치는 이제 국서와 차관에 더하여 모문룡의 송환까지 요구해 왔다. 조선에서는 국서·차관 요구를 수락하여 모문룡 송환 요구를 무마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논의 끝에 후금과의 교섭을 담당해 온 만포첨사 정충신(鄭忠信)을 차관으로 파견하되 국서는 보내지 않는 방안이 채택되었다. 정충신은 조선의 입장을 전했다, 국서가 없다는 이유로 끝내 누르하치를 접견하지는 못했다.

1621년 12월, ‘임반(林畔)의 변’이 발생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수천 명의 후금군이 모문룡을 생포하겠다는 내륙 깊숙이 진격하여 수백 명의 한인을 살해하고 회군했다. 이 사건으로 조선의 조야에는 강경한 분위기가 촉발되었다. 때마침 명나라 수군이 해안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조선과 명의 군사 공조가 재개될 조짐이 보였다. 후금과의 전쟁은 시간문제인 듯했다.

그러나 조선 조정에는 전쟁을 불사할 수 없다는 신중론이 암묵적이지만 널리 확산되고 있었다. 그간 후금과의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던 광해군조차 국서 발송만큼은 거부해 왔다. 명과의 관계를 의식했던 것이기도 하고, 누르하치를 자신과 동렬에 두기를 꺼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충신의 파견이 이루어질 때부터 광해군은 국서 발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실행은 주저했다. 그러다 전쟁이 임박하자 마침내 국서 발송을 결정하였다.

1622년 8월, 국서의 서식이 논의되었다. 핵심 안건은 수신자로 ‘후금국’이라는 국호를 쓸지에 대한 것이었다. 좌의정 박홍구(朴弘耆)는 일본 대마도에 보내는 서계를 원용하자고 했고, 우의정 조정(趙挺)은 건주위와 후금국을 함께 쓸 것을 제안했다. 대사헌 남근(南瑾)은 후금을 이웃 나라(隣國)로 대하기로 한 이상 국호를 써도 무방하다고 했고, 부제학 정조(鄭造)는 일본을 대하는 예를 따라서 어보(御寶)까지 찍어서 보내자고 했다. 대사간 유대건(俞大健) 역시 이웃 나라로서 예를 갖추어 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이웃 나라인 일본을 대하는 예에 따라서 국서를 마련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국서는 『광해군일기』에 보이지만, 『계록』에 수록된 판본에서는 서식까지 확인된다. 발신자는 조선 국

왕이었고, 수신자는 후금국³이라고만 기재했다. 서신에는 “우리 두 나라[我兩國]” 등의 표현을 써서 후금과의 국교를 공식 인정했고, 말미에는 일본에 보내는 국서의 예를 따라서 “이만 줄인다[不宣]”라는 표현을 썼다. 다만, 명나라 연호인 천계(天啓)를 씌으로써 조선과 후금이 명의 질서 안에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에 보내는 국서를 원용했다고 해서 서식이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봉서(奉書) 대신 치서(致書) 형태로 작성했고, 국호 뒤에 한(汗)이나 전하(殿下) 등의 표현도 쓰지 않았다.⁴ 또 일본에 보내는 국서에는 ‘위정이덕보(爲政以德寶)’라는 어보(御寶)를 날인했으나, 이때는 ‘교린이신지인(交鄰以信之印)’이라는 도장을 새로 주조하여 사용했다. ‘인(印)’을 써서 ‘보(寶)’보다 격식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3. 조선과 후금의 국교 수립과 국서 왕래의 정례화

1622년 조선의 국서 발송은 후금과의 관계가 한 단계 진전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이 발생하면서 양국 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인조는 친명배금(親明排金)의 기치를 내걸고, 모문룡과 협력하여 요동을 평정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이듬해 ‘이괄의 난’이 발생하면서 기세가 한풀 꺾였고, ‘요동 평정’은 요원해졌다. 후금에 대한 모문룡의 무모한 도발을 만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속출하는가 하면, 어떤 형태로든 후금과의 접촉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선과 후금의 교섭은 정묘호란을 계기로 재개되었고, 화친의 성사로 귀결되었다. 정묘호란 당시 청천강 이북에서 몇 차례 혈전이 벌어졌으나, 오래지 않아 교섭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국왕 일행이 강화도로 피신한 뒤 임진강에 방어선을 구축한 조선은 황해도를 완충지대로 삼아 평안도에 본진을 둔 후금군 지휘부와 교섭을 전개했다.

후금은 개전 초기부터 국서를 조건으로 철병 의사를 타전했다. 사실 후금군의 1차 목표는 모문룡의 동강진(東江鎭) 세력을 일소하는 것이었기에 조선과의 화친은 그보다 큰 수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도 기다렸다는 듯 국서 요구를 수락했다. 개전 일주일 만에 내려진, 반정의 명분을 감안하면 허무함마저 느껴지는 신속한 호응이었다. 물론 화친이 결렬될 만한 위기가 여러 번 있었다. 그때마다 후금군은 황해도

3 후금국 앞에 “운운(云云)”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는 주로 생략의 의미로 쓰인다. 실제 국서에서는 ‘건주위후금국’이라고 썼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4 일본에 보내는 국서에는 “조선 국왕 봉서 일본 국왕 전하”라고 쓴다. 실제로는 막부의 쇼군을 지칭하는 ‘일본 국왕’은 이후 몇 차례 변경되기도 하였지만, 기초적인 서식은 이와 같았다(이훈, 2011, 『외교문서로 본 조선과 일본의 의사소통』 경인문화사 참조).

로 진군하여 압박을 가했고, 조선에서는 척화론(斥和論)이 여론을 주도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생사존망을 걸고 전쟁을 치를 만한 여건은 되지 못했다. 조선 조정에서는 화친을 둘러싼 논의가 치열하게 펼쳐졌고, 후금군 지휘부 내에서도 전쟁의 지속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교섭을 거듭할수록 양측 모두 전쟁의 조속한 종결을 원하는 분위기로 기울었다. 화친에 대한 치열한 논쟁 속에서도 양국의 교섭이 단절 없이 진행되어 화친에 이르렀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조선은 후금과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화친에 동의했다. 국교의 성격은 국서의 형식 및 사신 명칭, 사신 접대 방식 등으로 규정되었다.

국서는 일본에 보내는 국서를 원용하되, 명 연호 대신 간지(干支)를 쓰거나 아예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체했다. 서식은 몇 차례 변화를 거쳐 조선 국왕과 금국(金國) 한(汗)이 서로 치서·봉서하는 형태로 정착되었다. 양국 모두 국서에서 스스로를 아국(我國), 상대는 귀국(貴國), 서로를 아울러 양국(兩國)이라고 했으며 상호 관계를 이룰 때는 인국(隣國)이라고 하였다. 일본에 보내는 국서와 마찬가지로 ‘위정이덕보’를 날인한 점도 특기할 만한 부분이다. 그 밖에 사신은 춘신사(春信使)·추신사(秋信使)라는 명칭으로 봄·가을에 연 2회씩 파견했는데, 일본에 보내는 통신사(通信使)를 염두에 둔 것이다. 금차(金差)라고 불린 후금의 사신은 접대소(接待所) 안에 왜차(倭差)·당차(唐差)⁵와 동렬로 구관소를 배치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했다.

이처럼 조선은 후금과의 국교를 인정하되, 일본과의 국교를 원용하여 이웃 나라(隣國) 간의 대등한 관계임을 표방했다. 이로써 외형적으로나마 명나라의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조선과 후금을 그 아래 위치시킬 수 있었다. 10년에 걸친 조선과 후금의 국교가 공식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이처럼 정당화를 위한 논리를 마련했기 때문이었다.

4. 청의 일방적인 서식 변경과 국교 단절

1636년 홍타이지의 칭제(稱帝)를 인정하지 못한 조선이 「절화비어교서(絶和備禦教書)」를 8도에 반포한 것이 병자호란(丙子胡亂)의 직접적인 발발 계기로 알려져 있다. 그 밖에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식에 참석한 조선 사신들이 공개적으로 배례를 거부한 일을 꼽기도 하고, 이들이 홍타이지의 국서를 조선에 가져오는 대신 통원보에 두고 온 사실을 거론하기도 한다. 하나같이 전쟁 발발의 책임을 조선에 돌리는 설명이지만, 정작 조선의 입장에 대한 설명은 찾아보기 힘들다.

5 당차는 모문룡이 설치한 동강진에서 파견한 차관을 뜻한다. 접대소는 황제의 사신을 접대하는 영접도감(迎接都監)과는 명확히 구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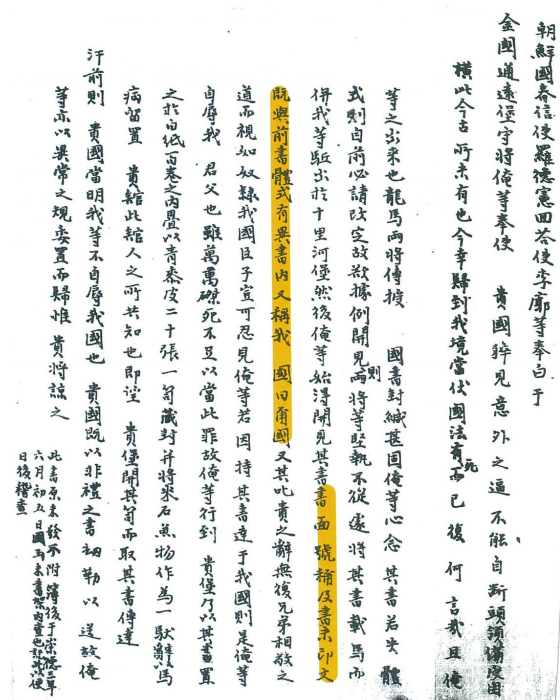
조선은 후금과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국교를 맺었다. 조선 측에서 국교는 형세의 강약이라는 현실을 고려하면서도 명분을 고수하는 나름의 방법이였다. 후금과의 화친이 불가피하다면 차라리 그 성격을 분명히 해서 조명(朝明) 관계와 양립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후금 역시도 명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지속하려면 적정선에서 타협하고 조선과 동강진의 연계를 약화시켜 배후의 위협을 줄여야 했다. 결국 양국의 국교는 상호 이해관계가 맞았기에 10년간 유지된 것이었다.

홍타이지의 칭제는 대청국(大清國) 탄생과 맞물려 있었으므로 조선과의 관계 수정도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다. 이 무렵 동강진은 약체화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속 관원의 상당수가 후금(청)에 투항하여 조선과의 연계가 군사적인 견제력으로 발현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후금(청)이 조선과의 국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득이 크게 줄어든 것이었다.

하지만 조선으로서는 명의 독점적 지위를 전제로 하는 대등한 관계를 국교의 조건으로 삼았으므로 홍타이지의 칭제를 인정할 수 없었다. 국교를 정당화한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명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게 되고, 자국 내에서도 여론의 동의를 얻을 수 없게 될 것이 자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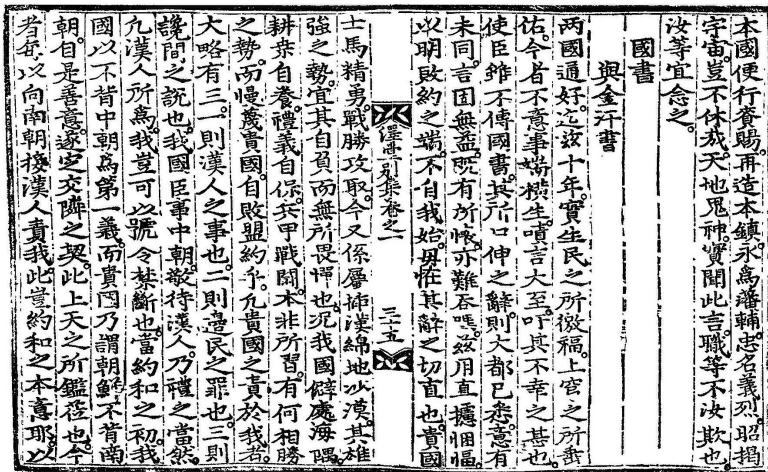
홍타이지는 조선의 사신 나덕헌(羅德憲)에게 “대청황제(大清皇帝)”와 “너희 나라[爾國]”라는 문구를 삽입한 국서를 전했다. 그동안 양국 모두 국서에서 상대를 “귀국”으로 기록했음을 고려할 때, 후금(청)이 사용한 “너희 나라”라는 표현은 더 이상 조선을 대등한 이웃 나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러니 조선 국왕의 신하로서 후금에 파견된 나덕헌 등은 이 국서를 수리할 수 없었다.

옆의 자료는 나덕헌 일행이 귀국하면서 국서 수리를 거부한 이유를 밝히고자 추후에 작성해서 통원보 수비에게 보낸 서신이다. 이는 비변사의 제안을 따른 것으로, 나덕헌과 이확(李廓)의 이름을 발신자로 기재한 정문(正文) 형식이지만 실제 작성자는 대제학 이식(李植)이었다. 주황색으로 표시한 대목은 호칭과 인장이 그간의 국서 서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과 조선을 너희 나라라고 칭한 것이 문제였다고 기록한 부분이다. 조선의 공식적 입장이 응축된 이 두 가지 사안은 국서가 국교의 성격을 규정한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



조선이 홍타이지의 국서를 거부한 경위를 설명하고자 통원보 수비에게 보낸 편지

출처: 『조선국내서부(朝鮮國來書簿)』 2책,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5710-5/2)



澤堂集 別集 卷一

10년에 걸친 국교에 대한 조선의 입장을 밝히고자 작성한 국서. 작성자는 대제학 이식이다.
출처: 이식, 『택당집(澤堂集)』, 별집 권1, 국서(國書), 금국 한에게 보낸 국서[與金汗書], 한국고전번역원(DB)

1636년 6월, 조선은 절화(絶和)의 경위와 국교에 대한 입장을 재천명하는 국서를 작성하였다. 그중 가장 중요한 대목은 당초 화친할 때 조선이 명나라(中朝)를 배신할 수 없음을 최우선 조건으로 내세우자, 후금에서도 이를 긍정했기에 교린(交隣)의 약속을 맺었다고 한 부분이다. 이는 조선 국왕을 하대하고 명나라 황제와 동렬에 서려는 홍타이지의 칭제를 인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였다.

당초 나덕헌과 이확은 조선 국왕이 '후금'에 파견한 사신이지, '칭'에 파견한 사신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들이 홍타이지의 칭제 기념행사에서 배례한다면 불충(不忠)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같은 이유에서 나덕헌 등은 조선을 “너희 나라”로 기재한 국서를 거부해야 했다. 그러니 이를 두고 조선 사신이 배례하지 않은 것을 전쟁의 발발 원인으로 꼽는 것은 공정한 해석이 아니다. 병자호란은 홍타이지가 10년에 걸친 조선과의 국교를 폐기하고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강요하고자 일방적으로 일으킨 전쟁이었다.

맺음말

칭나라는 명나라를 이은 중국 왕조였을까. 아니면 후금의 '확장된 버전'이었을까. 수백 년이 흐른 지금 명·청을 중국의 왕조라고 하는 데 큰 이견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대의 조선인들은 달랐다.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명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가운데 건주여진의 흥기를 마주했다. 이때 조선과 교섭을 시도한 건주여진의 '추장' 누르하치는 후금을 건국하고 훗날 칭나라의 태조가 되는 인물이다. 조선과 건주여진·후금·청의 관계는 단계마다 성격의 변화는 있었을지언정 연속선상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조선과 후금의 국교는 국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건주여진·후금의 국서 요구는 양국 교섭의 핵심

이었고, 관계의 파탄 역시 국서 서식 변경에서 시작되었다. 힘의 강약에 따른 것이지만, 조선의 입장에서는 후금과의 국교가 사실상 ‘양보’였다. 상국으로서 명의 독점적인 지위를 전제로 후금과의 국교를 수용한 조선으로서는 홍타이지의 칭제를 인정할 수 없었다. 홍타이지는 전쟁을 통해 조선과의 관계를 ‘군신(君臣)’ 관계에 입각한 형태로 바꾸는 데 성공했지만, 여진·후금·청을 바라보는 조선인들의 인식까지 바꿀 수는 없었다.

최근 중국에서는 조선과 후금의 관계를 ‘준(準)중변’ 혹은 ‘반(半)변속’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중변’이라는 키워드에 무리하게 양국 관계를 꿰맞추다 보니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기 힘든 용어가 버젓이 쓰이게 된 것이다. ‘형제’라는 말로 상호 관계를 비유하기도 했지만, 조선과 후금 간에 유통되던 국서의 성격과 서식의 형태가 ‘대등한 관계’를 상징한다는 점은 고려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인들이 보기에도 도저히 ‘중변’이라는 틀 안에 넣을 수 없기에 ‘준(準)’, ‘반(半)’ 등 개념부터 모호한 용어가 등장한 것은 아닐까. ‘중변’이라는 키워드로 한중관계사를 일관되게 서술하려고 힘쓸 것이 아니라, 양자의 관점을 아우른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 이 글은 집필자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입장과 무관합니다.

| 참고문헌 |

- 계승범, 2007, 『광해군대 말엽(1621~1622) 외교노선 논쟁의 실제와 그 성격』, 『역사학보』 193.
- 한명기, 2009,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 이훈, 2011, 『외교문서로 본 조선과 일본의 의사소통』, 경인문화사.
- 구범진, 2019,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 까치.
- 허태구, 2019, 『병자호란과 예, 그리고 중화』, 소명출판.
- 장정수, 2020, 「17세기 전반 朝鮮과 喉衿·淸의 國交 수립 과정 연구」, 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 鈴木開, 2021, 『明清交替と朝鮮外交』, 刀水書房.

| 장정수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조선 후기 대외관계사를 전공했고, 조선과 후금·청의 국교 수립 과정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했다. 최근 연구로는 「深河戰役 당시 광해군의 ‘密旨’와 對後金 배후교섭의 변질」(『사총』 104, 2021), 「인조대 초반 御營使·摠戎使의 설치와 親明朝排金 정책의 기류 변화」(『한국사학보』 86, 2022), 「정묘호란시 조선과 후금의 교전 및 교섭에 대한 단계별 검토」(『지역과 역사』 50, 2022) 등이 있다.

『동북아역사리포트』 지난 호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창간호** 보존과 철거의 갈림길: 일제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의 현대사
- 제2호** 시진핑 시기 험한이 고조된 원인은 무엇일까
- 제3호**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와 현황
- 제4호** 중국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공정의 변화 -신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속 한국과 동북아-
- 제5호** 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의 그림자
- 제6호** 중국이 주장하는 '문화원조'의 배경과 문제점
- 제7호** 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8호**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 제9호** '종번(宗藩)' 해석과 중국 대외관계 인식
- 제10호** 서양 고지도로 확인한 우리땅 독도와 동해 표기
- 제11호**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에 따른 대응 방안
- 제12호** (영문판)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13호** 일본 언론에 공개된 '독도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14호** 2022년 검정통과 일본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 제15호** 경찰 자료로 보는 램지어의 '태평양 전쟁의 성격' 비판
- 제16호**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의 동인(動因)과 쟁점
- 제17호** 중국인에게 한국전쟁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가
- 제18호** 1947년 미 군정장관, 독도 출장을 허가하다
- 제19호** 역사문제와 한일관계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했는가-
- 제20호** 2022년 일본 참의원 선거와 한일관계 전망
- 제21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결의 과제
- 제22호** 광복 77주년, 한일관계의 회고와 전망
- 제23호** 한국-중국 수교에 가려진 한국-중화민국 단교 30년
- 제24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기억하자
- 제25호** 동북공정 20년, 현황과 과제
- 제26호** 중국에서 사라지는 우리 고대사
- 제27호** 한국과 베트남 관계 30년을 되돌아보다
- 제28호** (영문판)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 제29호** 중국 장성(長城)이 한반도 서북부지역까지 들어왔다고
- 제30호** 연·진·한 장성은 요동지역에 있었을까
- 제31호** 우리 역사 속의 러시아를 생각하며
- 제32호** 중국의 방어적 민족주의와 공세적 문화 주장
- 제33호** 독일-프랑스 역사 화해의 회고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미래
- 제34호**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에서 사라진 '강제(forced)'
- 제35호** 일본제국 전쟁사에 비추어본 21세기 일본의 안보전략 평가
- 제36호** 시진핑 3기와 천하주의 그리고 동아시아의 갈등
- 제37호**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의 기원과 전개 과정
- 제38호** 음식도 발효를, 생각도 발효를 -김치와 파오차이의 차이-
- 제39호** 돌궐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중국 대외관계사
- 제40호**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과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 제41호** 2023년 검정 통과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분석
- 제42호**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 화해를 위한 공동 교과서 프로젝트
- 제43호** 고구려의 대당방어체제(對唐防禦體制)와 645년 전쟁
- 제44호** 한국인의 여름 나기, 삼계탕의 연원과 발달
- 제45호** 베트남 역사와 대중(對中) 관계
- 제46호**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억과 한중일 삼국
- 제47호** 몽골 지폐 도안에 담긴 역사와 국가 정체성
- 제48호** 16세기 한중 관계와 예의지교(禮義之交)
- 제49호** 관동대지진 100주년 -관청 기록의 봉인과 '민중 폭력'의 재검증
- 제50호** '한중호조'의 아름다운 기억 -1920년대 한중 관계의 역사 속에서 상호협력(互助)의 교훈을 찾는다
- 제51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 배경 토틀아 읽기
- 제52호** 중국의 백두산 문화 유적 및 내러티브에 대한 중국화 시도
- 제53호** 근현대 중국의 종주권 개념 변용과 한중관계 인식